

쌀 협상 국회 비준 반대 성명서

35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우리의 식량주권 민족의 생명줄인 쌀독을 외국에 그냥 내주고야 말 것이냐 지켜낼 것이냐가 판가름 나는 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을 지난 10월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졸속적으로 통과시켰고, 특히 여야는 수능 차질 우려를 이유로 “쌀 협상 비준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해 달라는 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11.23) 예정대로 국회 본 회의에 상정기로 합의한 상태로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농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시행되어 온 농업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농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군의회는 쌀 협상 국회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과 농민이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선결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따라서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7만 거창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쌀 협상 국회 비준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정부의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1.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서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준지연시 국가신인도 하락을 들먹이며 막무가내로 “조속한 비준”만을 외치고 있는 정부여당은 과연 우리농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부와 국회는 농민과 국민의 충분한 의사수렴도 없는 졸속적인 쌀 협상 비준안의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정부는 농민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정부를 제대로 파악하여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농업회생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농민에게 표명하고 실천하라!

3. 정부는 농업통상협상에 당사자인 농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합리적인 농업회생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국회-농업계 3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2005. 11. 23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